

‘협동조합의 철학과 역사’ 교육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학교 나눔관 5C 103호

www.icoop.re.kr institute@icoop.re.kr 02-2060-1373~4

시행일정	강좌명 및 교육내용	비고
2008. 7. 22 10:30~12:30 성공회대학교	1강. 협동조합의 역사 ○ Enclosure Movement ○ 산업혁명 ○ 빈자 계급의 자각 ○ 협동조합의 생성 ○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사 :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정병호
2008. 8. 19 10:30~12:30 성공회대학교	2강. 신자유주의와 협동조합 운동 ○ 신자유주의 개념 ○ Washington Consensus와 초국적 자본의 지배 ○ 신임헌주의 ○ 협동조합의 대응	강사 :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정병호
2008. 9. 23 10:30~12:30 KTX용산역별실	3강. 현대철학의 흐름과 협동조합운동 ○ Post Modern의 특징 ○ 탈중심적 해체주의 ○ '비판적 거리'찾기와 협동조합의 '인지지도' 그리기	강사 :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정병호
2008. 10. 14 10:30~12:30 KTX용산역별실	4강. 한국경제 개발정책의 흐름과 협동조합의 대응 ○ 근대화 지향 사회변동 - 압축혁명 - ○ 신자유주의 세계화 - 20:80의 세계 -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강사 :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정병호
2008. 11. 25 10:30~12:30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5강. 신사회운동과 생협운동 ○ 신사회운동이란? ○ 생활경제와 생협운동 ○ 생협운동의 과제	강사 :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정병호
2008. 12. 9 10:30~12:30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6강. 귀향의 철학 ○ Heidegger의 귀향의 철학 ○ 사회변동과 지역 간, 산업 간 갈등 ○ 귀향 - 본래적 자기의 발견과 생협운동	강사 :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정병호

협동조합의 역사

1.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

가. 본원적 축적과 토지총획

협동조합의 역사는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자본주의는 필시 빈부계급의 대립을 보이게 되고, 여기서 빈자계층 사람들이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 하게 되었으므로 협동조합의 역사는 자본주의 성립사로부터 찾아야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생산의 체계이다. 그렇다면 상품생산을 위한 공장 주인으로서 자본가는 누가 되며, 누가 공장의 임금근로자가 되는가? 이 최초의 자본가와 임금근로자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토지총획 운동이다.

영국에서 16세기와 18세기의 두 차례에 걸쳐 토지총획 운동(잉크로저 운동 Enclosure Movement)이 일어났다. 봉건제하의 토지소유제가 사유화되는 토지혁명을 겪게 되었다. 16세기 1차 총획은 양모생산을 위해 소수 힘 있는 사람들이 초법적 힘을 가지고 광대한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유를 선언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다수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농촌을 떠나야 했었다.

18세기에는 주곡생산을 이유로 2차 총획이 실시되었다. 이때는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의회 잉크로저라 한다. 2차때는 1차때 미완으로 그친 부분을 철저하게 총획하게 되었다. 토지총획은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이농실업자를 만들어 내었다. 이 소수의 지주들은 토지를 바탕으로 하여 최초의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본원적축적”이라 한다. 반면 다수 이농실업자는 “생산수단(토지)으로부터 분리”됨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된다. 즉 자유임금 근로자의 길을 걷게 된다.

여기서 최초의 자본주의적 계급 대립을 보게 된다.

나. 산업혁명과 산업자본주의

인지의 발달로 18세기 ~ 19세기에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어 산업혁명을 맞게 된다. 섬유기계를 비롯하여 제철공업과 교통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가 발명되었다. 기계의 발명은 상품생산에 있어서 혁명적 계기를 만들어 준다. 수공업과 공장제 수공업 체계가 공장제 공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공장제 공업이 가능하게 된 기계 체계이전의 생산양식은 일대 변혁을 겪게 된다. 산업혁명 이전의 생산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련되고 성능 좋은 기계는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게 됨으로써 그 이전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즉 최근의 우수 기계는 그 이전의 그만 못한 기계를 사장시켰다. 그러므로 수공업자와 공장제

수공업자는 분해되어 부분적으로 상승 이동하나 다수 사람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이 자본논리다. 질 좋고 값싼 상품의 생산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이면에는 몰락되고 도산된 약자들이 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새로 성립된 공장제 자본주의 즉, 산업자본주의는 그 지배적 자본가가 잉크로져 운동에 지주로 되었던 사람들로 구성되고 공장의 근로자는 잉크로져 운동 때 이농실업자로 되었던 사람들로 충원된다.

그런데 임금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비싼 생활필수품을 사서 살아가야만 했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금지되었고 시골에서 도시로 밀려온 떠돌이들은 구빈법으로 묶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

다. 빈자계층의 자각운동으로서 기계파괴 운동과 헌장운동

토지종획(Enclosure Movement 16세기, 18세기)과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18세기 ~ 19세기)을 거치면서 부자와 자본가 계급이 새로 형성된 반면, 가난한 경제적 약자 계층도 새로이 생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약자계층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자각적 자기 발견의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자신의 계급의식이 없던 卽自的(즉자적) 단계로부터 자기계급의식을 깨우친 對自的(대자적)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그것은 기계파괴운동(1811-12)과 헌장운동(Chartist Movement 1837-1848)으로 나타났다.

기계파괴운동은 노동자들의 빈곤이 기계의 등장에 있다고 보고 공장의 기계를 부시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노동운동인 셈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치안유지법과 단결금지법 등에 의해 진압되었다.

헌장운동은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에게는 보통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보통선거권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그들의 대표가 국회에 없다 보니 그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었다. 또 하나 당시 악법으로 군림하던 구빈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시골에서 도시에 밀려온 이농농민들 중에서 취직을 못하고 거리에 방황하는 떠돌이가 많았었는데 정부는 그들을 교정원에 가두고 값싼 노동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이 악법을 철폐해 주기를 주장하였었다. 이 헌장운동은 영국 민주주의 역사에 기념비적 사건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러한 상향적 민중운동의 주도적 인물들이 세계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이라할 로치데일 공평개척자 조합의 발기인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라. 로치데일 공평개척자 조합의 성립

이러한 민권운동적 차원의 사회운동은 1844년 드디어 로치데일 공평개척자 조합을 만들었다. 랑카셔 지방의 공장 노동자들은 그 생계가 심히 어려웠다. 임금인상 요구는 빈번히 거절되었고 동맹파업을 해보았으나 실패하였다. 이 어려운 처지에선 노동자들이 모여 의논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28명의 개척자들이 발기한 것이다. 그들이 만든 조합은 소비조합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생산과 분배를 통합하는 자급주의적인 협동조합의 실현에 있었다. 우선은 곤궁한 노동자들에게 염가로 일용생활품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관을 만들어 상호간에 약속을 든든히 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날로 조합은 번성하여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하였다. 이 성공적 교훈이 세계로 알려졌다. 후벨(Huber)에 의해 독일에 전파되고 지드(Gidle)에 의해 불란서에 전파 되었으며 마찌니(Mazzini)에 의해 이태리에 보급되었다.

2. 협동조합 운동의 전개

여러 나라에 전파된 협동조합 이론은 나라마다의 사정에 따라 각양각색의 협동조합으로 발전되어 갔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소비조합이, 불란서에서는 생산조합이, 독일에서는 신용조합이 특색 있게 발전하였다.

다음에 이들 세 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전개 과정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

가. 영국

로치데일 공평개혁자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도 수많은 협동조합이 명멸했었다.

초기 협동조합이 실패한 이유는

1. 이익금을 분배하여 나누어 가짐으로써 회전출자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2. 외상거래로 파산하는 조합이 많았으며
3. 조합정리를 잘 하지 못하였고,
4. 정기적인 회합을 하지 않았으며
5. 협동조합 원칙과 운영방법을 잘 몰랐고,
6. 조합경영을 소수인에게만 맡기고 조합원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실패를 거울로 삼아 이후 협동조합 운동은 알차게 운영되어 갔다. 영국에서는 특히 어려운 임금근로자 중심의 소비조합이 크게 발전하였다. 로치데일 조합도 소비조합이었다. (로치데일 조합의) 개점 당시 규모를 보면 버터, 설탕, 밀가루, 오토밀, 양초 등을 취급했다. 개점당시 재고원가는 16파운드 11셴링 이었다. 그런데 년도 말에 대상액이 710파운드에 달하고 자본금은 181파운드로 증가되었다. 22파운드의 잉여금을 얻었다. 조합원은 74명으로 늘어났다. 세세 년년 자본금이 늘고 조합원 숫자가 늘어갔다. 성공적인 조합 경영으로 1850년에는 로치데일 주민이 시작한 협동조합 곡물공장을 지원하였고 생산자 조합의 하나인 로치데일 제조협동 조합을 자금으로서 지원하였으며 1863년에는 현재의 도매 협동조합연합회를 창립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성공적인 로치데일 조합운영은 영국 소비조합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로치데일 조합 사람들은 불후의 협동조합 원칙을 만들어 실천하였었다. 지금도 그 원칙은 승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제 협동조합연맹의 원칙도 로치데일 원칙을 현실에 맞게 다소 수정 채택하고 있음)

그러면 여기서 소비조합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자.

영세한 임금근로자들이나 농어민들은 자기들이 일상생활 필수품을 사서 살게 되는데 이때 그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상인들이다. 그런데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상인들은 부당하게도 많은 이윤을 부쳐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소비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이 공동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싼값으로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가령 원가 1,000원짜리 물건을 상인이 1,200원에 공급했다고 보자. 이때 상인이 배제되면 1,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이 직접 생산 공장이나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것이다. 셴링 직거래가 아니더라도 유통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유통마진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소비조합이다.

초기 영국의 협동조합이 특징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소비조합의 궁극적 목적은 스스로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밀가루를 사다가 공급하던 것을 조합

스스로 제분공장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자급자족적인 협동조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나. 불란서

영국에 비해 자본주의 발달이 뒤늦었던 불란서는 불란서 내의 매우 급진적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생산조합이 발전하였다. 불란서 혁명은 간단 없이 자본논리를 관철시켜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 소생산자들은 자본가 계급에 대립된 자기를 인식하기에 이르러 생산조합 운동을 전개 했다. 왜 생산조합에 열중하게 되는가?

생산조합이란 조합원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조직 체계를 갖는데 특색이 있다. 즉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생산과 분배 방법은 사회주의적 방법과 같다. 불란서에 이러한 생산조합이 발달하게 된 것을 불란서 정치정세와 문관하지 않았다. 시민혁명 이후 자본주의 발전은 강자와 약자로 분리되는 자본 논리가 관철되었는데 여기서 경제적 약자들은 자본가 지배하의 노동자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체적 입장이 되는 생산조합 건설을 희망하였다.

생산자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개인적 경제활동을 보장한데 반하여 생산조합은 조합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제활동도 금지된다. 따라서 생산조합은 스스로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공동생산, 공동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조합은 궁극적으로 노동자가 생산한 모든 경제적 가치를 노동자가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를 부당히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본가의 부당한 착취는 생산조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불란서에서는 목공노동자 생산조합, 금세공 노동자 생산조합, 파란주(농업중심의 생산조합) 등의 생산조합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초기 생산조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조합운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그것은 생산조합 운동이 거대 자본 앞에 무기력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 순응적인 소비조합으로 가는 것은 협동조합 운동의 한계를 보인 것이기도 했다. 생산조합의 쇠퇴는 협동조합 운동의 이념적 쇠퇴가 아니라 자본력의 위력이 생산조합을 압도했었다고 볼 수 있었다.

다. 독일

독일의 자본주의는 영국 불란서 보다 뒤늦었다. 1850년대부터 1870년대 이르러서야 근대적 대공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었다. 독일의 자본주의는 아래로부터 이행이 아니고 위로부터 이행이었다. 그래서 봉건적 유제와 전기적 자본인 상업자본의 힘이 상당히 오래도록 자본주의의 길을 저해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영세 독립소생산자와 노동자들을 수탈하였다. 주로 고리채에 의한 수탈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횡행한 고리채는 초기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고리채를 벗어나고자 신용조합이 발달하였다. 도시의 독립소생산자나 농촌의 농민이 고리채로부터 벗어 나온 길은 신용조합이 필요했었다. 술체, 텔리츨를 중심으로 한 도시 신용조합과 라이파이센을 중심으로 농촌 신용조합이 유명하였다.

신용조합이란 자본력이 약한 사람들이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으로 대부해 주는 조합이다. 은행은 담보물을 요구하나 신용조합은 대인신용(對人信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상 모든 협동조합은 신용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도 생산조합이 생겼고 소비조합이 발전하였으나 신용조합이 가장 특징적으로 발전하였다.

3. 협동조합의 정체성

○ ICA 1995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 참조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Autonomous association)이다.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 협동조합의 원칙 :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원칙 : 자율과 독립

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원칙 : 협동조합간 협동

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4.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협(협동조합) 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1) 경제 사회적 분야 ; 경제 운동체로서의 보편적인 협동조합 운동으로써의 목표

(1) 신자유주의를 방어하는 현실적 대안 능력 확대 - 자본과 시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능력의 확대, 조합원의 요구를 구체적 대안으로 실천함으로써...

: 생협의 올바른 먹을거리 운동은 생태, 환경, 생명의 보전에 대한 운동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자본과 시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함께 한다. 아울러 비판에 머무는 운동을 뛰어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의 출발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대안을 갖지 못할 때에는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가 운동의 매개물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생협 운동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만을 해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 제시의 운동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식품첨가물에서 황색3호가 사라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 매장에서 생협은 친환경농산물 가격의 적정화를 가져왔다. 즉, 생협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거래를 하여 유통 마진을 대폭 줄임으로써 폭리를 취해온 일부 기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협운동의 대중화는 식품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생협이 전

개하는 대안 제시 운동이 대중화에 성공하게 되면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생협의 방침을 기준으로 노동과 자본 그리고 식품안전의 문제를 비교하게 되는 사회적 지표가 될 수 있다. 유통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고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교 급식법에 의한 직영급식 실현은 생협 조합원이 앞장선 사회운동의 결과였다.

(2) 사회적 경제의 확대의 추구

: 우리 사회는 현재 세금으로 사업하는 제1부문(공적 부문 public sector), 사적 자본의 영역인 제2부문(기업 부문 - private sector)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수축협이 있으나 사업은 제2섹터 방식으로 하고 결정적일 때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는 현실)그러나 일본, 미국은 물론 유럽은 NGO 또는 NPO같은 시민단체들이 협동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제3부문(the 3rd sector, social economy)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는 국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 교육, 지역재생 사업 등을 펼쳐 왔으나 이는 80년대를 경계로 재정과탄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정부의 예산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가 그동안 평가받지 못하고 배제되어 왔던 자원(하드, 소프트)을 부활시켜 자주적으로 복지, 고용, 지역 환경 보전과 같은 공동체사업(community business)를 펼치고 있다. 이 공동체사업은 협동조합운동과 결합하거나 협동조합운동의 흐름에서 발전,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유럽의 경우는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을 비롯한 제3섹터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형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생활자의 자발성과 다양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자주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지역 생협의 과제라고도 하겠다.

(3)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의미 있는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 “우리는 빵을 팔아 이익을 크게 하기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을 판다!” 주식회사 특히 현대의 주주자본주의는 경영을 하여 이익이 남으면 주주에게 돌아간다. 심지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구조 조정하여 해고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잉여가 생기면 다시 출자를 하여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임노동의 일자리보다는, 노동과 소유가 같이 하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노동과 소유가 함께 한다는 것은 임노동에 의한 노동의 소외를 줄이고 보다 주인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리듬에 맞는 적절하고 의미 있는 노동(decent work)을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 직원생협, 노동자협동조합, Workers Collective와 같은 대안적인 일자리,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사업을 수백 가지 규모로 창출한다.

2) 식량과 농업 분야 - 한국 사회가 놓여 있는 지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

(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Food System(식량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 생산자가 안전하게 생산한 농산물과 식재료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소비의 체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갖추어야 한다. 현재 세계의 식량과 식품은 다국적 곡물기업과 식품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먹을거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농민들은 인간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농산물이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수천 km를 이동하여 거래되면서 농민은 농토에서 쫓겨나거나 임노동자로 전락하고 농산물은 대

량생산을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로 범벅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는 몸에 독을 쌓는 결과를 가져 오는 먹을거리를 먹고 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수출 지향적인 세계 식량체계를 거부하고 가능한 자국 또는 지역에서 자급을 하는 지역식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생협연대가 2000년 들어서 꾸준히 진행해 온 전국 물류는 지역의 친환경농업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판로의 토대가 되었고 중부, 경남, 광주, 전남, 제주 등 지역 물류 센터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생협연대의 물류정책은 조합원이 늘어날수록 중장 기적으로 지역물류센터를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자연순환농업, 지역순환 경제 체계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한다.

(2)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 농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또는 자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홍성의 유기농 쌀이 남아서 소비운동을 하고 있다. 유기농 쌀의 소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조합원 증가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한 쌀을 소비하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 쌀의 소비 정체는 경작지 감소로 이어지며 한번 경작을 포기한 농지를 회복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경비와 노력이 들며 환경 훼손으로도 이어진다. 고투입농법(또는 관행농법)의 농지를 유기농 농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이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쌀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3) 생산과 소비의 상생이 가능한 시스템을

: 현대 자본주의와 시장에서는 상품을 생산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제로섬 게임을 하는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도 농산물에 대해 교역 대상이라는 상품의 개념이 도입되고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산업이 발달하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목표로 생산, 유통, 소비를 하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먹을거리에 대해 안전성이나 환경보전, 사회적 공익에 대한 기여보다 장기 보관과 먼 거리 유통 그리고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에 대해 알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협(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생산을 지향하는 윤리적 소비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농업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은 생산자를 압박하여 이윤의 폭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생협은 생산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소비자는 생산하는 자의 수고를 이해하고’ ‘생산자는 먹는 자의 입장에서 만드는’ 생산소비유통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다.

3) 정치와 지방자치 분야 - 협동조합의 윤리적 가치(사회적 책임)와 원칙(지역사회 기여)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1) 지역경제,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 자본주의의 시장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효율과 경쟁만이 강조되어 지역경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지역의 잉여가치가 서울, 수도권에 더욱 몰리는 편중을 가져온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나 공공재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협,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그것은 협동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의 소비와 경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므로 지역의 조합원의 확대 그리고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다. 생협에서 추진하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친환경우리농산물 소비를 위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생협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와 지방자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지역 생협의 조합원 규모가 이것을 뒷받침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협의 대중화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목표인 지역 생산 지역 소비체계를 이룰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2)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 생협은 조합원 교육을 중시하여 꾸준히 교육활동을 펼치며 총회를 통해 1인 1표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실천한다. 시장은 독점이 심화될수록 대중의 참여는 막히고 민주주의 중요한 원칙인 선거, 선출에 있어서 평등권이 훼손된다. 주식, 자본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 권한을 가지는 자본구성체(資本構成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협은 협동조합인 만큼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총회에서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갖는 인적구성체(人的構成體)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생협이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생긴 이후 1인 1표의 원칙을 지켜온 협동조합이 서구 사회를 비롯하여 모든 지역에서 지켜온 것이며,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서도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정치 선거에 있어서 평등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역사와 비교했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협동조합이 확대된 지역일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생협의 발전은 그와 비례하여 민주주의의 확산과 정착을 가져온다.

신자유주의와 협동조합 운동

- | | |
|----------------|----------------|
| 1. 서론 | 2. 신자유민주의 실체 |
| 3. 협동조합 이념의 위기 | 4. 협동조합 이념의 복권 |
| 5. 결론 | |

1. 서론

협동조합의 역사는 자본주의 성립사와 같이한다. 신분제사회가 타파되고 시민사회가 등장하자 그 경제적 지도 원리는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장경쟁은 불가피 부자와 간난한 사람으로 분리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또는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사정에 따라 보수적 기능주의적으로 지배체제에 순응하면서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체제 개혁적으로 대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빈자(약자) 보호의 사회적 안전판(Social safety valve)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마주하면서 전에 없던 협동조합 운동의 이념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하면서 초국적 자본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빈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맑스의 “소외론¹⁾”을 다시 읽게 되며 린드블럼(C.E.Lindblom)의 “감옥으로서 시장(Market as prison)²⁾”을 재음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운동은 새로운 위기에 대해 보수적 이념에 휩싸여 자기를 상실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배 권력이 빈곤층으로 하여금 빈곤을 느낄 수 없도록 고도한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³⁾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인간적 경쟁정글(inhuman competitive jungle of capitalism)로부터 새로운 자기 자각(“즉자적 존재(the in itself)”로부터 “대자적 존재(the for itself)로”)을 필요로 하게 된다.

1)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지성사, 1978, pp69-78의 <소외된 노동>pp83-103의<소외의 원인과 그 극복>참조 Marx저, 김호균역 「정치경제학비판 요강III」 백의pp,124-126

2) Charles E. Lindblom, "The market as prison" Journal of politics, vol,44,1982

3) Poulantzas, Nicos는 국가기구를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나누면서 교회 등 종교기구, 정당, 조합, 학교, 언론기구, 영화, 법률체계, 가정 등을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분류하고 있다. Poulantzas, Nico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London : New left Books. 1974

본론에서 신자유주의 실체를 살피고 협동조합 운동의 이념적 복권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 실체

신자유주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 결합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적 개입을 주장했던 그린(Green, Thomas Hill)과 홉하우스(Hobhouse Leonard Trelawney)의 주장을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그런데 1929년 세계적 공황의 극복책으로 대두되었던 케인즈적 복지국가(Keynsian welfare state) 이론은 국가 개입주의적 입장에서 그 후 일정하게 역사적 기여를 한바 있었으나 1970년대 중반 세계적 불황을 맞으면서 복지정책은 시장기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나태와 정체를 초래한다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근거는 하이에크(Hayda, F.A)와 프리드만(Friedman, M)에 소급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류로서 1930년대 이후 독일에서 오이켄(Eucken, W.G)등에 의해 주장된 “사회적 시장경제”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오이켄은 반독점과 사회복지를 주장하면서 케인즈적 절충주의와 현실추수주의를 비판하고 “조절적 질서정책”을 통해 독점과 계급대립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중반 세계적 공황극복의 방안으로 주장되고 1980년대 선진 국가들의 세계화 추진이론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 중반 세계적 공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상되어진 신자유주의는 그간의 케인즈적 국가개입이 경제적 정체를 가져왔다고 보고 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이행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외연적 축적체제”로부터 “내포적 축적체제”로, 그리고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축적체제”로 그 단계를 나누어 살펴 볼 수 있게 한다.⁴⁾

첫째, “외연적 축적 체제”란 기존의 생산 기술의 변화가 거의 없이 축적과 기술혁신이 생산재 부문에서만 진행되는 시기다. 이 때 농촌의 값싼 노동력과 비용 없는 자연력이 최대한 이용된다.

둘째, “내포적 축적제도”(Fordism)단계에서는 과학적 관리방법이 도입되고 포드주의 일관 공장체제가 도입됨으로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적과 기술혁신이 생산재와 소비재 생산을 대규모로 하게 되며 “소품종 대량생산”을 꾀하게 된다.

셋째, Post-Fordism 단계에서는 극소 전자혁명과 생명공학, 신소재혁명을 바탕으로 포드주의의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이행하게 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유연성체계다. 즉, 유연적 생산기술, 유연적 자본운동, 유연적 노동시장, 유연적 국가개입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내포적 축적단계인 포디즘적 케인즈주의로부터 포스트-포디즘적 체계로 이행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컴퓨터 발명으로 정보통신망이 확대되고, 이로 말미암아 자본이동과 상품의 생산기술 및 교환이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바

4) 김호기, 김영범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헤게모니 프로젝트」 임현진, 송호근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5, p.199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 배경으로 한다.

여기에 날개를 단 것이 다국적 기업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 자본이 이동하고, 공장을 지으며, 장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다.⁵⁾

따라서 케인즈적 복지국가(Keynsian Welfare State)는 쉘페터적 근로복지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 되고, 국민 국가적 조직 자본주의는 초국가적 탈 조직 자본주의로 된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을 위한 정부정책은 “작은 정부”정책과 “공급측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등장은 새로운 문제점도 야기 시킨다.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onomics)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간 복지정책의 성과물인 “한 국민”을 “두 국민”으로 분리시켜 놓는다.

국제적으로는 중심 국가군이 제3세계 국가군에게 무거운 짐을 이전시킨다. 선진중심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짐을 안은 제3세계 국가들은 그 짐을 국내 약소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앞선 생산방법이 후진국 생산방법과 접합(Articulation)되면서 후진국은 신식민지 종속 우클라드(Uklard)를 만들게 된다. “외적 모순”을 “내적 모순”으로 응결시킨 것이다.⁶⁾

신자유주의를 데리다(Jacque Derrida)에 따라 “다르게 읽어”보면 IMF, WTO, IBRD 등의 세계체제 3두 권력이 만들어 놓은 각종 규칙은 약소국가에게 있어서는 명이요 독물이다.

1990년대로 IMF와 IBRD 및 미국의 핵심적 두뇌들로 구성된 Washington Consensus에 의하면 채무국가의 경제조정을 위한 정책으로 금융자유화, 경쟁환율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폐지, 국경기업 사유화, 탈규제화, 재산권보호, 재정규제, 교육 의료비 보조금 폐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⁷⁾ 실로 “대리정부(Parallel government)”의 설치로 주권제한을 가하고 있다.⁸⁾

이러한 집요한 전략은 “나이 이니시아티브(Nye Initiative)”에서도 발견된다. 1994년 당시 미국의 21세기 아태전략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념, 문화 등의 국제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경제, 군사적 아태 주도권 장악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문제가 군사적, 문화적, 외교적 문제와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IMF를 맞이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민적 경쟁국가”로 나가느냐 아니면 “탈 국민적 자본유치국가”로 가느냐 하는 문제다.⁹⁾

여기서 우리나라는 “국민적 경쟁국가”의 길을 택하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무차별한 자본 공세에 못 이겨 어떤 자본이던 유치해서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된 잉여가치 배분에 참가하고자한 나라들은 “탈 국민적 자본유치국가”의 길을 가게 된다.

우리나라가 “국민적 경쟁국가”의 길을 택한 것은 그간의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 중진국 선발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길은 선진자본과의 싸움이 버겁다는 것이 문제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IMF 요구사항도 이행해야 하고, 기반이 튼튼한 세계적 수준의 기업 군도 거느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난 수년간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대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사채의 공채화” 정책도 맞보았고, “기업손실의 국유화”도 맞보았다. 탈규제

5) 김성구, 김세균의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학과지성사, 1998

6) 정병호 <신자유주의 공세와 개혁과제>, 「4월혁명회보」 1998.12

7) 줍스키저, 강현주역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모색 1999, p.26

8) 미셀, 초스도프스키저, 이대훈역 「빈곤의 세계화」 당대, 1998, p.38

9)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김성구, 김세균의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학과지성, 1998, pp.74-75

화, 민영화, 사유화, 개방화, 유연화 등의 IMF요구는 급기야 중소기업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흑자부도와 실업대란도 경험하게 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국민적 경쟁국가”의 길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군이 필요함으로 특정 기업군을 위해 “공급측 경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세와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두 국민 정책(Two nation project)의 희생 층이 생겨났고, 엘리트-카르텔(Cartel of elite)에 의한 서민층이 배제적 민주주의(Excusive Democracy)의 대상이 되었다.

20:80이란 말은 이미 익숙한 숙명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엄마 젓(Tits)과 놀이(Entertainment)를 즐기는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 (tits와 Entertainment의 합성어)그룹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⁰⁾

그러나 어느새 이 20:80이란 말은 세계적 규모의 빈부계층으로 받아드려지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 어느새 지구상 인구는 디지털시대의 빈부계층으로 분리(Digital divide)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빈부 고랑을 깊게 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국적 기업의 구미에 맞는 “허울뿐인 세계화”(Helena Norberg-Hodge)에 대항하면서 양극화된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3. 협동조합 이념의 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 무한경쟁,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담론은 어느새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IMF는 “시장은 만사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 방송과 저명인사들이 이를 미화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불려내기(Ideological interpellation)¹¹⁾를 통해 신자유주의 지상의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약소자의 입장을 대면할 협동조합 운동은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말” 대신 “남의 말”에 포위당해 있다.

이제 협동조합은 그 조직과 경영에 있어서 영리기업의 그것을 닮기에 열중하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이 기능주의적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영합되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은 역사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적 이념의 표현기구로 자리 잡아 온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로버트 오웬(Robert Owen), 불란내의 샤르르 푸리에(Charles Fourier), 독일의 라살(F. j. g. Lassalle) 등은 당대 협동조합 운동의 지도적 사상가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이념 요소를 협동조합에 접목시켰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시장실패를 목격하고 약소자가 자위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와 행동은 서구사회를 건전한 양 날개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어차피 빈부강약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갈등의 제도화”(Dahrendorf.R)수준의 협동조합 탄생의 이념적 모습을 찾았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협동조합의 원칙과 법령체계, 그리고 그 본질적 내용¹²⁾등은 하나

10) Martin Schuman 저, 강수돌역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7, pp.26-711

11)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Lonson : New left books, 1970.pp.127-186 및 앞 부의 주 3)참조

12) 정병호 「협동조합론」, 대원 1987, pp.116-12

같이 인권과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가 깔려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협동조합을 시장에 노출시켜 놓고 시장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IMF이후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일반시중 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두고 개편하고 있으며, 경제사업 또한 전문 유통기구와 똑같은 경영원리를 가요하고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이 개성을 무시하고 시장법칙에 따르게 되면 자본논리의 가치 법칙에 따라 도태 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C. Bettelheim의 “생산양식 접합이론”에 따르면 지배적 생산양식이 열세한 생산양식을 해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 구조 속에서 협동조합은 “보다 지배적인 생산구조”속에 편입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¹³⁾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명맥을 유지해온 것은 오로지 그 본질적 개성을 가지고 대항력(Countervailing power)을 행사함으로써 소외 세력의 이익을 대변해 왔기 때문이다.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전략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진 모든 단체와 기구들의 몰락 내지 쇠퇴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약소자의 안전판 구실을 해온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부연코자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반공규율사회”에서 보여준 사회주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본질은 여러 진보적, 개혁적 이데올로기와 “선택적 친화력”(Elective affinity-M.Weber)을 가지고 자본주의체제의 모순과 약점을 안고 사는 계층을 보호해 나가자는 것이다.

스스로 차별적 기회구조(Differential opportunity Structure)에 갇혀 있으면서 “빈곤의 사회적 상속”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각을 하지 못하고 “남의 말”에 포위되어 있다면 그 심각한 이념적 위기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협동조합 이념의 복권

협동조합운동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자기 활로를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신자유주의 체제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하더라도 체제속성이 낮은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적 제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속성을 개혁하고 수정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 가지 담론들과 터놓고 운동의 사상가들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유지해 왔었다. 가령 영국의 홀리요크(Holyoak, George, J.)는 “협동조합은 한 발자국씩 적의 영토를 점령하는 평화의 군대”라고 설파하였으며, 레이드로(A. F. Laidlaw)는 그의 「2000년의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이 사회주의적이나 자본주의적이나 하는 논쟁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포이슨(Ernest Poison)은 그의 저서 「협동조합공화국」에서 “사회적 역사는 계급의 역사이다.”¹⁴⁾라고 지적하면서도 사회변화는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맑스적 경제 환원론이 아니라 “인류는 경제 법칙에 복종하는 상태로부터 자기의지에 의하여 그 역사를 창조하는 자유로운 경지를 향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⁵⁾ 포이슨은 “협동조합 공화국은 사회 문제의 사회주의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그것은 단지 공동적 행동의 경제사상을 두고 하는 말이며, 개인주의

13) 김호진 「제3세계의 정치경제학」, 한울 1984, pp.209-301

14) Ernest Poison 저 진흥복역 「협동조합공화국」, 선진문화사 1986, p.19

15) 포이슨, 앞의 책, p.20

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하고 있다.¹⁶⁾ 특히 포이슨이 1920년에 쓴 이 책에서 벌써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이런 견해는 네오·맑스주의 사상이나 포스트-맑스주의 사상과 상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현존하는 여러 사상 중 협동조합 이념과 상보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상을 탐색해 봄으로서 향후 협동조합 운동의 이념적 지평을 넓혀보고자 한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 약점을 수정하자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을 살펴보자. 이 이론은 1940년대 독일 경제의 초석을 쌓은 이론으로서 프라이브르크학파에서 그 단초를 내놓은 것으로서 오이켄, 에르하르트, 아르막 등의 학자군단과 마주하게 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정통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균형과 사회보장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의 확립과 동시에 경제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다.¹⁷⁾ 이 이론의 중심에는 “구성의 원칙”과 “규제적 원칙”이 있다. 구성의 원칙은 사적소유, 개인의 자유 열린 시장, 계약자유, 화폐가치 안정 등의 시장질서의 기본요소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시장권력의 억제 및 수정을 위해 독과점과 카르텔 방지, 소득 재분배, 외부효과의 수정 외에도 파산법, 회사법, 세법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규제하게 되는데 이것이 규제원칙이다. 이 이론을 다른 말로는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이 이론을 헌법 이론에 도입하여 “헌법 경제론”이라 소개하기도 한다.¹⁸⁾ 문제의 핵심은 시장경제 체제에 “사회적 형평”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에도 도입되어 있다.¹⁹⁾

두 번째로 “시장 사회주의”를 살펴보자. 자본주의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꾀하는 사회주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의 “자기소유명제”를 부정함으로서 생산력이 떨어져 전체사회의 정체를 가져온다. 따라서 미시적 경제행위는 인정하면서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협동조합)와 시장체도가 결합된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²⁰⁾

이 학파의 중요 멤버인 코헨(G.A Cohen)은 자유와 평등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며, 엘스터(Elster)는 개인주의적 미시적 방법을 옹호하고, 로우머(J.E. Roemer)는 노동가치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산관계 분석에 기초하여 착취론을 재구성하고자 한다.²¹⁾ 달리 말하자면 이 이론은 시장원리를 사회주의 원리와 배합시켜 보자는 주장이다.

셋째, 네오맑스주의와 포스트-맑스주의를 살펴보자. Neo-Marxist로는 플란차스, 요페, 히르슈, 제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 주장에 의하면 전통적 맑스주의의 경제 환원주의를 부정함으로서 사적 유물론의 기본적 입장을 부정한다. 정치의 상대적 자율성과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맑스주의 기본 명제를 비판한다. 플란차스는 계급투쟁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면서 계급 복합적인 여성운동, 학생운동, 환경보호운동, 지역주의운동 등이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을 견인하고 있다고 한다. 제슈 또한 계급환원주의를 부정하고 있다.²²⁾

이에 대하여 Post-marxism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맑스주의의 자유화를 위한 이론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분석적 맑스주의(합리적 선택 맑스주의라고도 함) 유로코뮤니즘, 사회민주주의

16) 포이슨, 앞의 책, p.71

17) Otto Schlecht저, 민경국의역 「사회적 시장경제」 비봉, 1993

18) 민경국 「헌법경제론」 강원대출판부 1993, pp.21-22

19) 김철수 「신헌법학개론」 법문사, 1981, p.67, p.176, p.177

20) J.Elster.K.O Moene 저, 노응원역 「시장사회주의」 비봉, 1990

21) 정병호 「이기나 협동이나」 협동연구원, 1994, p.68 및 같은 면주12)의 신정환, 김용학 참조

22) 조경남 「사회주의 체제론」, 교양사, 1996, pp. 194-197

계열과 급진적 민주주의를 포괄하고 있다. 이들 역시 전통적 맑스주의 교리를 부정한데서 시작한다. 그들은 더 이상 계급결정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한 적대계급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해집단의 갈등양상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맑스주의와 자유주의와의 결합을 주장한다. 커닝햄은 맑스주의와 자유주의가 변증법적으로 “지양제고”될 것을 주장하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가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²³⁾

그러나 전통적 맑스주의에 대한 이러한 수정주의에 대해 학문적으로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구맑스주의 이론의 정당성을 이어오고 있는 학파도 있다. 그들은 Neo-marxism이나 Post-marxism을 전향한 맑스주의 출신(Ex-marxism)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학문적 입장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사상과 상보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이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러한 관련 사상을 소개하면서 협동조합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보탬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간 협동조합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보면 그때그때마다 자기 적실성을 가지면서 자기 개성과 본질을 잘 유지해 왔다고 본다.

특히 신자유주의 이래 협동조합 이념을 포위하고 있는 “남의 말”로부터 협동조합 “자기의 말”과 “자기 말을 옹호하는 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자유방임보다는 국가 개입을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1\$ 1표보다는 1인 1표를, 계급투쟁보다는 계급협약을, 이기보다는 공동체를, 도그마적 평등성취 방식보다는 다원적 평등성취 방식을, 일인의 백보보다 백인의 각 일보를 성취해 낼 수 있는 협동조합 본질적 이념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 행동의 반경도 넓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NGO운동과 연대해야 된다고 본다. 자칫 잘못하여 협동조합의 2대 지주인 운동체적 요소와 경영체적 요소 중 그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금의 동향으로 보면 운동체적 요소는 무시되거나 경시되고, 경영체적 측면만 강조하는 듯하나 이것은 결코 사회전체의 조화를 위해서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5. 결론

자본주의 사회는 분명 빈부계급이 존재한다. 자본주의가 경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해 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외 세력의 인권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잘못 계몽된 것에 대한 “계몽의 계몽”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 즉, 지난 계몽주의적 시미혁명 이후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상극적인 이념을 제시해놓고 그중 하나를 따르도록 강요해 왔다. 즉,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그것이었다.

그런데 두 사상은 똑같이 인간의 합리성이라 주장하면서 제각기 자기류 사상만을 고집함으로서 타방을 사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로 우리 인류는 이러한 부질없는 실험을 지난 200년 동안 당해온 셈이다.

여기서 필자는 “책 읽지 말라”는 해체론적 탈 현대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령 어린나이가 학생이 아담스미스를 읽었다고 하자, 아마 그 학생이 다른 저자를 만나지 못하고 학생시절을 경과했다고 가정해 보면 아마 그 학생은 평생 동안 아담스미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반대로 그 학생이 맑스를 읽은 뒤에 다른 저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 학생은 맑스의 식민이 되어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책이란 저자가 책을 써놓은 뒤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23) 앞의 책, pp. 197-199

반드시 고쳐 써야 할 사정이 생겨난다. 따라서 책을 쓴 저자는 역사적으로 “저자의 퇴장”을 거쳐 “저자의 실종”을 낳고 급기야 “저자의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즉, 탈현대적 상황을 저자가 죽고, 독자가 등장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의 책은 독자의 개인 의사를 반영하여 새로 쓰여져야 할 문명적 단계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하나 부연할 것은 당초에 책을 썼던 저작도 그 책은 저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미 관련 참고서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만들어진 합작품인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책이라 고쳐 써야 할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쓴다는 사실이다.²⁴⁾

필자는 여기서 이데올로기의 가변성과 새로운 역사성을 들고 싶다. 과거에 우리는 책의 저자의 식민 생활을 해왔다. 이제는 그런 책(이데올로기)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독자의 생각을 반영한 새로 쓰일 책을 얻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안겨준 평등의 박탈과 사회주의 사회가 안겨준 자유의 박탈을 새로운 세기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이 해답은 결코 신자유주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동격 이성”을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자본주의 모순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모든 학설과 사상이, 그리고 사회주의 모순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동원된 어떤 모든 학설과 사상이 이제 “협동조합” 이념 정립의 장으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양 체제의 도그마 속에서 200년의 잘못된 실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구제, 공동이용, 공동금융의 공동체가 새로운 사회의 한 축으로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1. 12)

24) 김호기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 1992, pp. 42-43 김동욱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2, pp.253-278

현대철학의 흐름 - 해체론적 접근

1) 현대철학의 주요한 줄거리의 하나로 해체론을 들 수 있다. 해체(De-construction)란 근세 철학의 흐름인 이성, 본질, 실체, 중심, 전체, 총체 등을 해체코자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체대상인 근세철학은 자기 절대성을 고집하면서 자기주장과 맞지 않은 생각을 「억압」하거나 「배제」해 왔다.

그런데 해체철학은 앞서 말한 전통철학을 해체함에 있어서 기존의 개념을 완전 부정해 버린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개념위에 새로운 개념을 보태에 가는’ 「비판적 연계(Critical articulation)」 또는 「접합」을 해 나간다.

여기서 해체철학의 거장인 데리다(J-Derrida)의 「차연(differance)」이란 어떤 뜻이 처음 선언되었을 때부터 그 뜻과 일치할 때까지는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을 보이면서 끝없이 연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된 의미에 이르기까지는 무한히 미끄러져 가면서 「보충」이 요구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어떤 책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씌어졌다고 하자 이때 그 책은 저자에 의해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꾸준히 개정되어져야 할 운명에 있다는 것이다. 그 책이 씌어질 때, 그 이후에 도래할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쓸 수 없는 일이다. 씌어진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쳐 쓰거나 보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뉴턴의 학설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의 학설이 다시 하이젠벨크에 의해서 고쳐 쓰거나 보충된다는 말이다. 이런 사정이 ‘사제하의 글쓰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삭제된’ 부분은 보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자. 한 권의 책이 나올 때까지 그 저자는 부모님의 가르침, 또는 여러 선생님의 가르침, 그리고 여러 가지 참고서를 참조하여 썼으므로 어쩌면 그 저서는 자기만의 창작물이 아닐 수 있다.

저서의 탄생은 이미 사람의 생각이 「섞여 짜여」있는 것이다. 마치 「혼성모방곡(pastiche)」처럼 말이다. 그래서 어떤 저서건 간에 저서는 이미 자기 고유의 영역을 허물고 모든 독자에게 노출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구의 저서든 간에 독자는 보충의 권리를 향유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현대는 「저자의 퇴장」과 「저자의 실종」시대를 거쳐 「저자의 사망」시대를 맞고 있다. 저자의 사망시대는 곧 「독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자는 더 이상 절대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현대는 저자의 「절대성」을 해체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근세를 지배해 오던 로고스 중심의 이데올로기들은 해체되고 보충되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모자람을 독자 즉, 시민이 보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 이러한 해체론은 근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봉해 왔던 총체적, 전체적, 가치체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일러준다.

과거에 자유주의 철학은 사회주의를, 사회주의 철학은 자유주의를 완전히 억압하거나 배제해 왔었다. 그런데 해체론에 의하면 기존의 이러한 주의 사상에 대하여 다른 한쪽의 손을 들어주

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상에 더하여 사정이 달라진 상황을 「비판적으로 접목」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을 달리 설명하면 상호 텍스트성(inter textuality)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체론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배제하고 다른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체성, 총체성, 중심성을 다 같이 비판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코자한 것이다. 기존의 도그마적 「왕의 머리」를 베어 버림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경찰과 감옥」을 털어 버리자고 하는 것이다.

해체론적 이데올로기론은 도서관의 여러 책을 참조하여 새로운 책을 쓴 것처럼 이데올로기 보존 또한 선행된 이데올로기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에 비유한다. 이런 현상을 「도서관 현상」이라 한다.

따라서 미래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작은 이야기」로 된다는 것이다. 이 「작은 이야기」는 「독자의 시대」에 걸맞게 독자들이 「지식의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점이다. 독자의 시대는 곧 시민의 시대를 뜻한다.

3) 이러한 논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과 맞닿아 있다. 탈 이데올로기적 시대에 있어서 탈현대적 해체론적 사유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기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가는 역사적 요청을 받게 된다.

변화무쌍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동시대인 간의 대화가 요체가 된다. 역사적 방향은 「당신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심미 민주주의」 제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를 미리 재단하여 그 공식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굴레로부터 해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체론적 사유는 폭넓은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제3의 길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임슨(F.Jameson)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론이 후기 산업사회, 다국적 자본주의, 전자화사회, 고도기술사회를 반영하여 피상성, 단편성, 역사적 빈곤성을 가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론은 모순과 약점이 있는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 거리(critical distance)」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해체론이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혼성모방」은 도리어 「내파」(내부폭발)를 가져온다고 비판되고 있다. 특히 혼성모방은 상업주의와 고도 기술주의 영상시대 그리고 다국적 기업중심의 세계화와 맞물려 도착된 행복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차연」을 내세워 역사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중심성, 총체성, 전체성을 비판하면서 도리어 또 다른 보수적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중심성, 총체성, 전체성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현대철학의 한 부분인 해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소개해보았다. 아직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서 있다. 찬·반의 몫은 여러분의 것이다.

다만 현대가 시민적 사회로서 시민이 스스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채점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권재민의 원리가 추상에 머물지 않고 실천의 현장에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나가야 할 「인지지도(認知地圖)」를 그려 나가는 것은 독자의 몫이고 시민의 몫이다.

(98. 12. 20)

신자유주의 철학의 비판적 고찰

1. 서론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철학과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70년대 중반 세계적 공황 극복의 방안으로 제안된 신자유주의는 당초의 호언과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그 모순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가간 불평등은 국내로 이전되어 국내의 빈부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 증대의 이면에는 근대적 가치를 해체(Deconstruction) 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자리잡고 있고, 이것은 또다시 유연적 생산기술, 유연적 자본운동, 유연적 노동시장, 유연적 국가기능 등을 내세운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과 결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포디즘에 관해 살펴보고,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어떻게 결합되어 사회경제적 모순을 증대시키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포디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글에 소용된 내용만을 간추리려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 문학사조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그 후 철학, 예술, 문화, 사회학, 정치학 등의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니체로부터 비롯된다. 로고스 중심주의, 합리주의 등의 근대철학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니체는 “체제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체제는 무너진다”고 했다. “신이 죽었다”고 외쳤을 때 이념의 선행성은 부정되었다. 니체를 이은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을 거쳐 데리다에 이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소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바르트(R. Barthes)의 ‘저자의 죽음’이란 말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무릇 어떤 책은 저자에 의해 씌어진다. 그런데 그 저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쳐 쓰게 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저자의 퇴장”을 거쳐 “저자의 죽음”을 맞게 된다.

이때 원저작에 새로운 말을 보태어 쓰게 되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차이”로 읽힌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충은 원저작 당시에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이다. 이것을 “삭제하의 글쓰기”라고 한다. 그 삭제되었던 것이 후배의 손으로 보충된다. 그런데 그 원저작도 저자의 혼자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선생님께 배운 것이거나 책에서 배운 것을 보태어 쓴 것이다. 이것을 “도서관현상”이라고 한다. 즉, 책의 운명은 글쓰기의 종결이 아니라 공간의 “차이”와 시간의 “지연”에 따른 “차연(Differance)을 그 때 그 때 보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은 어떤 결정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미결정성,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책과 저자의 운명처럼 이데올로기도 끊임없이 고쳐나간다는 말이다. 이런 사정을 포스트모더니즘이 말해 준 것이다.

데칼트 이래의 이성중심, 합리중심의 모더니즘을 아도르노(Adorno)는 “논증적 사유의 폭력”이라 비판했고 리오타르(Ryotard)는 “기호의 테러”라고 질타했으며 데리다(Derrida)는 “로고스중심의 허구성”이라 비난했다. 이런 비판적 입장은 특정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또 리오타르는 “큰 이야기보다 작은 이야기”를 주장했고 푸코는 “왕이 머리를 베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이념의 논쟁은 “억압”해왔던가 “배제”해 왔던 도그마를 벗어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이것을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또는 상호질의성(Inter-rogat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근대적 가치를 해체하는 쪽으로 기울이면서 탈근대문화론, 다원주의, 개량주의 등과 만난다. 물론 자본주의적 총체성이나 마르크스주의적 총체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결국 “저자의 시대로부터 독자의 시대”로 바뀐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자신의 인지지도(認知地圖)를 그려나갈 때 어떤 환경과 마주하느냐가 문제다.

영토국가, 국적국가, 민족국가 등의 중심성이 해체되었을 때 그 안의 계급문제 인종문제 등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제임스(F. Jameson)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후기 산업사회, 다국적 자본주의 전자화사회, 고도기술사회를 반영한 피상성, 단편성, 역사적 빈곤성 등을 외면하고 비판적거리(Critical distance)를 상실했을 때 도리어 “내파”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이 미국에 유입되어 세계화, 민족해체, 기업자유, 독점자본의 “문화지배소”로 변용되면서 “독자시대”의 “내파”를 인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트모더니즘이 1987년 이후 그 논의가 활발해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군사정권으로부터 개량국면이 주어졌고 1989년 이후 세계적 냉전구도의 해체가 또 다른 개량국면을 던져 주었다. 그러나 1987년 여름 노동자투쟁은 민중진영의 중심력을 얻게 되었으나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근대문화론은 노동중심성을 부정하고 그 대신 신사회운동(환경, 여성, 지역운동)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 그 이전까지 활발했던 사회구성체 논쟁이 포스트모더니즘 유행에 자리를 내놓은 결과도 초래했었다.

다음에 포스트포디즘에 대해 살펴보자.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은 조절이론가들에 의해 자본주의 발전관계를 구획 지으면서 사용한 개념이다. 즉, 외연적 축적단계, 내포적 축적단계(포디즘) 그리고 그 다음단계인 현 단계를 포스트포디즘 단계로 보았다. 포스트포디즘의 전단계인 포디즘은 케인즈적 복지체제와 짝을 이루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축성해 왔다.

포디즘은 케인즈주의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관료주의적으로 보장된 평등주의와 국가주의적 사회개혁을 그 바탕에 깔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적 침체와 불황을 초래한 원인을 포디즘에서 찾는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면서 다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포스트포디즘이 생겨났다. 포스트포디즘 단계의 특색은 극소전자혁명과 생명공학, 신소재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획한 것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는 유연성(Flexibility)을 전략변수로 삼아 유연적 생산기술, 유연적 자본운동, 유연적 노동시장, 유연적 국가개입 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유연성과 시장의 결합으로 전례 없던 경쟁의 치열성을 보게 된다. 케인즈적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가 가고 슈페터적 근로복지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 된 것이다. 여기서 “작은 국가 큰 시장”을 만나게 된다. 자본, 상품, 기술, 정보, 노동이 민영화, 사유화, 무한경쟁, 개방화 등의 구호와 만나면서 다방면의 사회구조를 개편한다. 포스트포디즘이 세계화와 짝을 이루면서 종래의 국가조절 기능은 탈국가화 또는 탈조절화 된다. 이런 현상을 두고 스트랜지(S. Strange)는 “국가의 퇴각” 현상으로 보았고 슈미터(P. Schmitter)는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통치불능” 현상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의 통치(government)가 시장으로, 시민단체로, 지자체로 분산되는 다층적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변한 것이다. “국가 역할의 공동화”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비(D. Harvey)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포디즘이 각각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사회구성체를 이룬다는 점이다.

두 입장은 상호간에 “선택적 친환력”을 가진다. 모더니티를 비판하고 나선 포스트모더니즘이 기성가치를 해체코자 한다. 한편 포디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포스트포디즘이 출현했다. 물질토대를 이룬 포스트포디즘은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을 기획하므로 “유연성”을 무기로 한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압착(Time-space compression)을 특색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추동력을 보게 된다.

여기에 걸맞는 세계화의 자본주의 문화지배상품이 포스트모더니즘 쪽에서 생산된다. 포스트포디즘의 유연성에 걸맞는 영화, 소설, 만화, 언론매체가 동원된다. 그들 작품의 구성인자는 차연, 혼성모방, 탈중심성, 경계의 함몰, 의미의 불확실성, 전통적 가치 거부, 원본 없는 복제, 깊이 없는 것 등으로 채워진다. 양자 간의 상호작용은 세계화의 자본논리에 복속된다.

3. 양자 결합의 실상과 그 비판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포디즘이 결합하여 몰고 온 실상은 세계화의 가속화, 불평등의 심화, 저개발국가의 외채증가, 노동환경의 변화, 국가통치기능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포스트담론은 자본주의 본질적 모순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반된 논의가 있었음도 사실이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계급환원주의를 반대하면서 신사회운동으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입장(Laclau & Mouffe).

둘째, 마르크스 관점에서 소비경제를 비판하지만 경제적 토대에 원인을 귀착시키지 않은 입장(Baudrillard).

셋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맹렬히 비판하는 입장(Callinicos).

넷째, 네오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긍정성을 결합시키려는 입장(Harvey)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1987년 이후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숨죽여 왔던 흑백논리를 허물고 남북대화 문제, 진보정당 의회진출, 미국철수 주장, 보안법폐지 주장 등을 펼 수 있었던 점을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의 효과로 볼 수 있고 환경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지역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토양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다. 또 들뢰즈(G. Deleuze) 가타리(F. Guattari)에 따라 “사회주의적 의식화를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내의 내재적 탈영토화 과정을 극한에 이르기까지 가속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 병폐를 파괴시킨다”는 유물론적 욕망이론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데리다(Derrida) 네그리(Negri)의 사상이 그와 닿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량적 논의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금 세계 상위 20% 부유층이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고 반면 세계최빈층 20%는 단지 GDP 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층이 5백만 명을 넘었는데 그것은 도시가구 상위 20%계층(5분위)의 월소득은 658만원으로 하위 20% 계층(1분위) 112만원 보다 5.87배가 많아 1982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한다(2005, 5.20 일간지 보도). 이런 사정을 두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논리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좋은 자본주의”로 “나쁜 자본주의”를 치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독일식 질서자본주의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치유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대안 부채론(TINA)을 정면으로 비판하자는 것이다.

4. 부가하는 글

1) 현대그룹 회장은 대북문제의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통일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 장관의 할 일을 주식회사가 대신한다. 더러는 국방부장관의 할 일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것은 포스트 포디즘 단계에서의 “국가기능의 퇴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삼성그룹은 안기부 도청테이프에서 검찰과 언론사를 심부름꾼으로 삼아 정치자금을 정치계에 뿌렸다. “억압적 국가기구”인 검찰을 장악하고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인 언론을 장악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포스트 포디즘체제에서 “국가권력이 재벌권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된 것이다.

3)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포스트 포디즘의 산물이다. 육체노동자들이 지식노동자로 바뀌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계약직, 파트타임제, 정년단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자들이 공장 외에 다양한 직장에 “산포”되어 있다. “다중”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의 중심성이 흐트러진다. 이것은 자본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국가는 조절기능을 잃고 “탈조절자”로 된다.

4) 앞서 살핀 현대그룹의 정부기능 대행, 삼성그룹의 정치권력 장악, 노동시장의 중심 분산 등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포디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물에 정치경제학이 갇혀있는 꼴이다.

한국경제 개발정책의 흐름과 협동조합의 대응

I. 근대화 지향 경제개발 정책의 배경

- 1960년대초 후진국 상황 극복 위한 “위대한 각성”
(great awakening) - Myrdal
- 선진국 따라 잡기 위한 “압축혁명”
(Telescoped Revolution) - V.M.Dean
- 근대화 추진 위한 자생적 세력이 없어 정부가 그 “역사적 역할 대신”
(Historical Sutes) 즉, 정부에 의한 하향식 추진 - Gerschenkron
- “초청에 의한 상승”(Promotion by invitation) - Wallerst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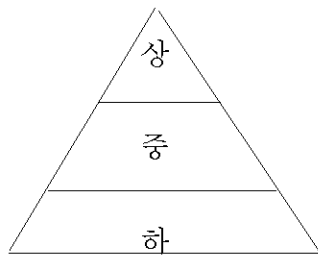
II. 개발정책의 실상

- A.O.Hirschman류의 “불균형 성장이론 채택”
- 전후방 관련 산업의 보완성 효과가 큰 공업우선정책(석유화학, 시멘트, 비료, 철강, 자동차)채택 - 수출드라이브 정책 연계
- 일차산업의 “연기선택”(Postponement choice) 누수효과(Trickle down effect)기대 - 저임금, 저가격 정책
- 60년대초 1인당 GNP 80\$
90년대 1인당 GNP 10,000\$
2007년 1인당 GNP 20,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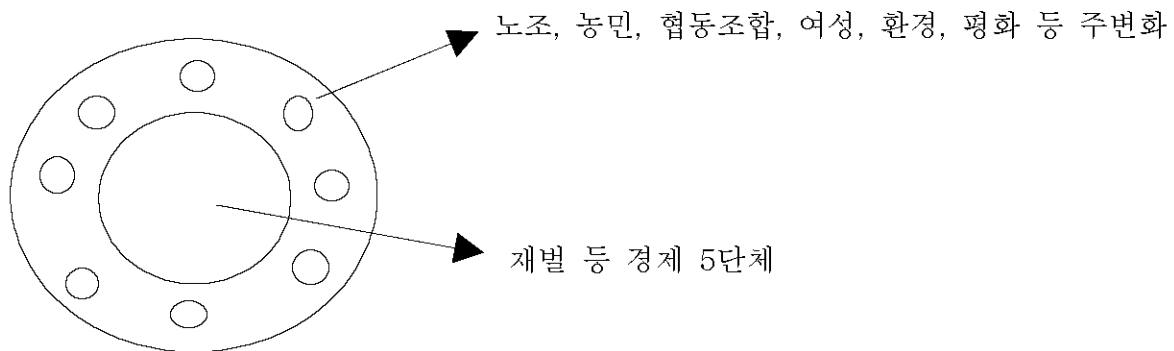
III. 경제개발 정책의 평가

- 시장권위주의 체제를 시장민주주의로 전환에 실패
- 부의 편재 현상(두 국민 계층 탄생)
-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 불균형
- 지배 정당성 위기 초래
- “기술”이 “해방”적 가치 압도

사회적 중층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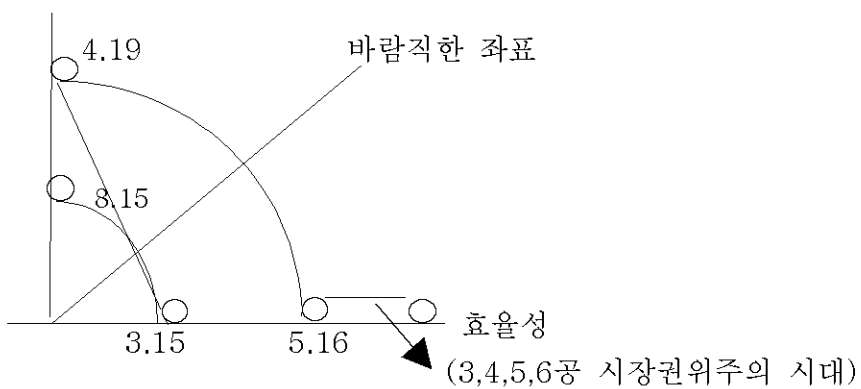


사회세력의 베어링 시스템



정당성과 효율성의 괴리

정당성



IV. 새로운 도전 - 신자유주의

- 1970년대 중반 기준의 복지제도 비판
(케인즈적 복지제도에서 슈페터적 복지제도로 전환)
- 조직자본주의에서 탈조직자본주의로
-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 초국적 자본주의(Trans - State Capital)가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유연화, 개방화 주창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영향 증대

- 기업의 자율성, 투명성 요구

V. WTO와 IMF의 도전

- WTO(1944, Brettonwoods에서 IMF, ITO(국제무역기구), IBRD 설치논의) ITO는 1948년부터 GATT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5년 WTO로 재편

- WTO 4 ROUND

- ① GR - Green Round - 환경
- ② BR - Blue Round - 노동
- ③ TR - Technology Round - 지적재산권
- ④ CR - Competition Round - 경쟁

그러나 강대국과 후진국간의 불평등 강요

- IMF란?

- ① 국제통화 질서 유지
- ② 일시적 국제수지 적자 국가에 대한 지원
- ③ 가입국 대외 능력 제고

- IMF 사태 원인론

- ① 외부적 요인론(투기적 국제금융자본의 장난)
- ② 국내요인론(불량 피뢰침 같은 정책 담당자, 은행, 기업 등의 부실)
- ③ 내외 요인 복합론(뇌졸중론)

- IMF의 요구

- ①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
- ② 금융기관 정리, 감독 강화
- ③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 투명성
- ④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
- ⑤ 수입선 다변화 정책 폐지

VI. 결어

- 건전한 경제기반 구축 필요 - 한 국민 정책 필요
- 중층구조 해소를 통한 국민적 경쟁력 제고
- 신자유주의에의 대응은 국내적 사회통합을 전제로 함
- 시장원리는 만능이 아니므로 적절한 국가개입 필요
- 1\$1표에서 1인1표의 정치개혁이 필요함

신사회운동과 생협운동

신사회운동과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하여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신사회운동으로부터 그 이념적, 실천적 자원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다만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신사회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자기제한적(=체제개혁적 혹은 방어적?) 급진주의와 자기확대적(=체제변혁적 혹은 공격적-해방적?) 급진주의 전략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적이고도 유연한, 즉 ‘이중적 유연성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점에서 우리는 신사회운동의 ‘좌파 자유해방주의’(left libertarianism)(Kitschelt, 1990; Della Porta and Rucht, 1991)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국 한국의 신사회운동이 지닌 해방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시민사회를 자유해방주의적 공동체의 연합(a free association of libertarian communities)으로 재구성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를 공동체들의 공동체로(a community of communities)로 변경시키려는 장기적인 실천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신사회운동의 이념적 특성²⁵⁾

역사적으로 신사회운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대두하기 시작하였는가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점과 관련하여 1960년대의 전세계적인 반문화 및 반체제운동, 특히 프랑스의 1968년 5월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월러스타인(Wallerstein)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간주하고 있는 프랑스의 5월운동은, 주지하듯,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문명비판의 성격을 담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잠재력을 분출하였던 것이다. 비록 프랑스 5월운동은 제도화와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하였다고 규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였을 때, 그 이념적 참신성과 조직적 자발성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고 있다.

1968년 프랑스 5월운동은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핵심적 성격은 신좌파(new left)와 자유해방주의(libertarianism) 혹은 무정부주의(anarchism)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좌파는 기존의 정통 맑스주의가 지닌 경직된 이론적 실천적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모순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던 반면, 자유해방주의나 무정부주의 계열의 운동은 모든 관료화된 위계서열적이고, 경쟁적인 사회관계 대신에 자주적이며, 상호협동적인 공동체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5월운동의 이념적 지향성은 당대의 지역자치운동, 자주관리운동, 반전반핵운동, 페미니즘, 환경운동, 인권운동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 혹은 재조직화시키는 근원적 동력

25) 김성국, 「한국시민사회의 성숙과 신사회운동의 가능성」, 임희섭, 양종희 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1998, 나남출판, p. 48~55

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사회운동인 것이다. 우리가 신사회운동의 주된 이념적 특성을 ‘좌파 자유해방주의적’(left libertarian)이라고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키트셸트(Kitschelt, 1990:180)가 지적하고 있듯이, 신사회운동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쟁 및 성취주의 논리를 불신하며, 평등주의적 분배를 추구하는 전통적 사회주의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좌파’이며 개인적 혹은 집합적 행위의 자율성을 규제하려는 모든 형태의 관료제적 권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자유해방주의적’이다. 요컨대, 신사회운동은 직접/참여민주주의, 개인과 집단의 고양된 자율성 그리고 사회관계의 상호협동과 공존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신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을 적어도 분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스코트(Scott, 1990:19)는 (표 1)을 통하여 신사회운동을 기존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대표적 운동형태인 노동운동과 운동의 위치, 목표, 조직, 행동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대비시키고 있다.

<표1>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 간의 핵심적 대조

	노동운동	신사회운동
위 치 목 표	점차 정치체계 내부로 이동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권리	시민사회 가치 및 생활양식의 변화 시민사회의 방어
조 직 행동수단	형식적/위계서열적 정치적 동원	네트워크/풀뿌리 직접 행동/문화적혁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피셔와 클링(Fisher and Kling, 1994) 또한 신사회운동의 특성들을 ①지역사회/커뮤니티 기반, ②초계급적 집단화와 문화적 정체성, ③새로운 직접민주주의 위계서열적 사회관계의 거부, ④문화와 사회적 정체성을 위한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 부여, ⑤정치적, 문화적 영역의 파편성 그리고 ⑥지역사회의 자립성과 자주성 강조라고 기술하고 있다.²⁶⁾

과거의 사회운동(old social movement)에서는 맑스주의와 자유주의(liberalism)의 이념 아래 노동운동과 시민권확대운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노동자의 중산층화와 보수주의화가 진척되면서 노동자는 역사의 변혁적 주체세력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중앙집권적 형식민주주의의 모순과 역기능이 드러나면서 지역자치, 시민자치를 추구하는 직접/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베버(Max Weber)가 일찍이 경고한 바 있듯이, 인간의 자율적 삶은 거대하고도 효율적인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삭막한 관료제의 절창 속에서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황폐화되듯이, 인간의 내면적 세계 또한 물신주의와 소비주의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권력과 폭력에 의하여 감시되거나 위협당하며 파편화되기 일췌이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새로운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을 확립하고자 주체성과 자주성의 의

26) 물론 신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은 때로 상당한 정도의 연속성과 유사성을 공유한다. 신사회운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을 김호기(1995)는 맑스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판이론의 신사회운동론, 조절이론의 신사회운동론, 그리고 라클라우와 무페의 신사회운동론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코헨(Cohen, 1985)은 신사회운동을 유럽의 정체성지향이론과 미국의 자원동원이론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밖에 문화결정론(Melucci, Touraine, Inglehart)과 구조결정론(Offe) 등의 분류가 있다(김호기, 1995:180 n3).

미를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정보혁명의 확산과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인하여 세계화의 추세가 시대적 조류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서 기존의 국민/민족국가의 존재의의는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의 급속한 전지구적 확산은 국가의 경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야말로 자유로운 네트워크형 사회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적 시민사회 혹은 전지구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희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은 아마도 자유해방주의의 이상향인 자유연합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가장 분명하게 시사하는 현실적 모델이 아닐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으며 여기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신사회운동의 좌파적 자유해방주의가 핵심적인 이념으로 정착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현대 아나키즘의 지도적 이론가인 북친(Bookchin, 1989:271)의 지적처럼, 신사회운동의 아나키즘적 차원은 ‘반위계주의(anti-hierarchicalism)에서 출발하는 자유연합(혹은 자발적 참여)과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동체사회를 형성하려는 아나키즘의 목표와 신사회운동의 주요 형태인 페미니즘, 지역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는 상호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강력한 선택적 친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신사회운동에 내장되어 있는 이러한 자유해방주의적 급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생태주의는 지금까지 인류의 주된 생존방식이었던 인간에 의한 자연정복과 지배 혹은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상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생태주의는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의 원인을 단순히 자본주의적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도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생산력의 끊임없는 증대를 요구하는 산업주의(industrialism)의 논리에 구속되어 있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일방적으로 인간중심의 자연개발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주의를 채택하는 한, 다시 말해, 인간중심주의, 개발주의, 성장주의, 산업주의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한 생태계의파괴는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존속할 뿐이다. 왜냐하면 산업주의는 불행히도 자연자원의 파괴를 초래하는 에너지와 (그것의 변형체인) 물질적 상품의 소비를 끊임없이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간과 자연 간의 합치 혹은 조화를 추구하는 자연권 개념을 공통적인 가치로 내면화하고 있는 아나키즘이야말로 생태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의 사회생태학적 에코아나키즘(Bookchin, 1980, 1982, 1990)은 ‘자연과 사회의 변증법’ 혹은 ‘생물학과 정치학의 결합’을 통하여 인간위주의 자연지배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제기하면서, 비계급적인 생태사회의 동적 균형 또는 에코토피아를 추구하고자 한다. 인간사회란 전체 생명사회(biotic society)의 한 부분으로서 ‘제2의 자연’(second nature)이다. 그렇지만 자연과 인간사회의 관계는 상호 일방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반위계적 관계상의 참여와 분화라는 도덕적 원칙” 혹은 생태학적 윤리에 입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의 생태주의가 지향하는 에코커뮤니티(ecocommunity) 혹은 에코토피아(ecotopia)는 기존 사회를 재창조함으로써만 실현가능한 것이다.

둘째,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남성지배와 여성복종이라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여성해방의 문제 또한 단순히 자본주의적 착취나 가부장제적 억압의 차원에서만 설명하기보다는 모든 사회조직과 사회관계에 구조화되어 있는 서열적 권력관계의 산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은 (남성적=폭력적) 인간에 의한 자연(=여성)의 정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서열적 지배-종속관계의 재생산기구들인 국가, 종교, 가부장제, 자본주의 등에 의하여 정당화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므

로 현존하는 남성적(=폭력적) 지배구조(=국가체제)를 해체하려는 페미니즘의 목표와 “강제적 지배가 없는 자유연합의 상태”를 추구하면서 강권적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신사회운동의 자유해방주의적 과제는 상호 긴밀하게 합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페미니스트운동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남녀간 성적 투쟁의 논리에 기초하는 성의 정치학을 극복하여 남녀 협동의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신사회운동의 아나르코-페미니즘(anarcho-feminism)은 성의 생태학에 주목한다. 지배와 복종이라는 인위적 질서의 산물인 모든 형태의 제도화된 사회적 불평등(예컨대, 계급, 성, 인종, 지역불평등)은 이 사회로부터 강제정이 제거될 때만 자연적 질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체제나 현존하는 국가체제 아래서 완전한 성적 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신사회운동의 페미니즘은 급진화된 투쟁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는 강권적 중앙집권주의를 거부하는 지역자치운동 혹은 지역공동체운동을 의미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국가는 각종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을 제도적으로 독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팽창적 국가주의는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라는 형태로 약소국가의 주권을 약탈하여 식민지를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도 지역자치와 시민참여를 억압하여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여 중앙/국가에 의한 지방/지역의 지배라는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비록 국가는 그간 민중/시민운동의 집요한 저항에 의하여 분권적 지방자치를 다소나마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생활세계의 식민화(colonization of life world) 혹은 국가에 의한 지방의 내적 식민화(internal colonization)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과 지방의 위기에 직면하여 강권적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대안적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대두하고 있는 전지구화의 추세와 함께 국가주의는 연방주의적 개혁전략 앞에서 급속히 약화되는 반면 지역적 자율성, 자치성, 공동체성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지역주의의 확대는 국가권력의 단순한 지역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지역 토착세력이 지배하는 지방자치란 국가주의의 지역적 재생산에 불과할 따름이다. 진정한 지역적 분권주의란 국가권력이 소규모 지역단위의 시민들 자신에게 되돌려지는 시민권력의 시대를 요구한다.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 직접적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면 국가란 강제적 권위의 집결체로서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마셜(Marshall, 1993:646)의 지적처럼 ‘공동체들의 공동체’(a community of communities) 혹은 자율결사체들의 연합체(a federation of free association)로서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현대국가의 위기는 하버마스(Habermas, 1975), 오페(Offe, 1984), 그리고 오코너(O'Connor, 1973, 1984)가 강조하였던 정당성의 위기, 관리의 위기, 재정적 위기와 같은 자본축적의 위기 혹은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를 의미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조직의 원리와 사회발전의 주체로서의 역할위기를 또한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헨(Cohen, 1984:23)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부분적인 제도적 개혁에 의해서 현대국가의 정체성 위기가 극복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과대성장으로 과부화되어 있는 현대국가(Scott, 1990)는 이제 철저한 분권화와 시민권력화를 통하여 최소국가(minimum state)의 단계를 거쳐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지역주의는 반강권국가적, 지역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자치사회를 추구하는 자유해방주의를 통하여 가장 적극적인 실천방안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비폭력의 평화주의야말로 신사회운동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왜냐하면 자유해방주의가 거부하는 국가의 본질이 바로 강권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핵)무기와 전쟁, 경찰과 법

은, 결정적 순간에는 언제나, 폭력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거나 파괴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국가의 폭력화’현상은 최근에는 테러리즘, 조직범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형태로 사회에도 확산되어 이제는 ‘사회의 폭력화’가 전개되어 우리는 그야말로 벡(Urlich Beck)이 말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살게 되었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은 톨스토이와 간디의 평화주의 노선을 따라서 현대의 반핵(anti-nuclear)운동, 반군사(anti-military)운동, 총기휴대금지운동, 반범죄운동, 성폭력퇴치운동 등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실은 인간사회의 역사적 발전과 함께 폭력 또한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폭력은 양적으로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포화, 조직화, 대형화의 추세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증가를 단순히 매스미디어에서 폭력물이 범람하고 있는 현상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폭력은 항상 경쟁이 심화될수록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컨대 폭력은 전쟁이라는 국가간 경쟁의 최종적 국면에서 가장 극대화되고 있으며, 또 전쟁상태의 심화과정에서 핵무기라는 극한적 폭력수단이 고안되었던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사회가 자본주의적 경쟁체제 대신에 자유연합과 상호부조의 공동체로 전환된다면 폭력 또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불평등 또한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남성의 폭력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여성들은 남성에 의한 각종 물리적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공포감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위축으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참여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경쟁관계가 첨예화된다면 비록 남녀간 경제적 평등은 상당히 성취될 수 있을지 모르나 폭력적 충돌사태는 더욱 빈번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성적 평등 혹은 여성해방은 남녀 간의 성적 투쟁이나 사회적 경쟁에 의해서 획득되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인간적 상호협조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귀향의 철학

1. 협동조합의 철학을 만나보기로 한다.

1) 영국 로버트 오웬(Robert. Owen, 1771-1858)

- 벤담의 공리주의, 리카도의 노동가치설, 페스타로치의 사회교육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 1813, 「신사회관」(일명 성격형성론) 저술 : 인간의 성격은 사회적환경의 산물로 본다.
 - 사회주의 사상의 인식론적 근거가 되다.
 - 교육을 통한 선량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①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 ② 노동을 부의 원천으로 보고 사회소유권 주장
 - ③ 상부상조를 통한 협동주의
 - ④ 정당한 지대를 통한 착취배제
 - ⑤ 교육을 통한 인간개조(공상적사회주의자로 규정한 근거로 되다.)
- 뉴·라나크시대(New-Lanark)
 - 29세대 1800장인으로부터 인수받아 경영.
 - 주택개량, 학교설립, 구내매점 경영.
 - 수익금 중 700파운드를 교육비에 충당하고,
 - ① 아동노동의 금지
 - ② 연소자의 노동시간 단축
 - ③ 야간노동금지 등 공장 환경 개선
 - ④ 아동근로자의 교육
 - ⑤ 공장 감독관의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초기 공장입법을 주장하다.
- 뉴·하모니시대(New-harmony)
 - 53세 때(1824) 미국 인디애나주에 New-harmony 이상촌 건설, 생산과 분배의 일체화로 어떤 종류의 착취도 배제코자 했다. 박애주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주의자로 자기전환을 했다.
 - 자본주의 모순은 사유재산제도, 화폐, 분업에 있다고 보았다.
 - Head, Hand, Heart 3H 조화된 인간상을 그린다.
 - 1825년 참정헌법,
 - 1826년 완전평등협동체헌법
 - 1826. 7. 4. 「정신적독립선언」이란 연설로 「악의 삼위일체」란 사유재산, 종교, 그리

고 이것 중의 하나와 결합한 결혼제도라고 비판.

- 구성원 엄선치 않은 점, 경비의 무계획적 지출, 지나친 낙관론으로 실패

○ 국민공평노동교환소(National Equitable Labour Exchange)

- 1829년 영국으로 돌아오다.
- 1832년 국민공평노동교환소 설치
- 같은 양의 노동시간이 드는 물건끼리 등가 교환
- 노동표권 부여
- 투하노동시간 기준
- 숙련공과 비숙련공원 간의 차이 고려않음.
-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을 적용치 않음(뒤에는 이를 고려하였음)
- 현대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사상적 기원이 되다.

2) 영국 윌리엄 톰슨(William Thompson 1783-1833)

○ 공상적 협동조합 사회주의자 이자 리카도와 사회주의자.

- 리카도의 노동가치론, 오웬의 협동조합 철학, 벤덤의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 저서로 「부의 분배원리」 1824, 「보상받는 노동」 1827
- 그의 사상은 “노동전수익권론”이다.
- 경쟁의 원리 배제 - 협력의 원리 주장.
- 공동소유, 공동생산의 협동조합 사상.
-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 ① 노동자, 직공, 상인들을 상호 적수로 보고 이기주의가 작용된다.
- ② 여성에 대한 체계적 억압이 존재한다.
- ③ 시장의 무정부성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
- ④ 지식의 획득을 탐욕과 개인적 이익에 봉사토록 하여 지식의 과급을 지체시킨다.

3) 영국 윌리엄. 킹(William King. 1786-1865)

○ 의사

○ 기독교사상 사상의 박애주의자.

○ 계급투쟁 반대 - 평화주의자.

○ 공상성 배제한 현실주의자

○ 1827년 최초 소비조합 설립

○ 소비조합실패이유가 노동자들의 무지에 있다고 보고 계몽운동에 주력

○ 월간지 「협동조합인」발행 - 매호 권두에 “지식과 협동은 힘이다. 지식에 의하여 지도된 힘은 행복이다. 행복은 만물의 최종 목적이다.”

○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을 협동조합운동에 적용 - “복음은 왕과 왕후가 사는 궁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사는 초옥에서 발생한다.”

○ 오웬과 톰슨은 국가와 부자기부를 기대했으나 킹은 이를 반대.

생산수단 공유에 의한 산업이윤 박멸보다 중간 상인의 상업이윤배제위한 소비조합에 힘쓰다.(현실주의적 방법 채택)

4) 불란서, 샤르르,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

○ 거꾸로 선 사회(Perverted Society)의 모습

- ① 의사 - 많은 환자의 발생을 기대
 - ② 검사 - 각 가정에 큰 싸움이 일기를,
 - ③ 건축가 - 도심의 1/4 정도가 화재가 나기를,
 - ④ 유리집 주인 - 창문이 박살날 우박이 쏟아지기를,
- 「산업적 협동사회적 새세계」서문에서.

○ 에피소드 둘

- ① 마르세이유 식료품 점원 시절에 주인집에 매점하여 두었던 쌀이 값이 오르기 전에 모두 썩었으므로 이를 전부 바다에 버리도록 지시 받은 일이 있었다.
- ② 파리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손님이 사과하나를 먹고 지방에서 거래된 사과 값의 100개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한 것을 보았다.(산업적 제집단 계열의 이론 정립에 이용)

○ 대표작 : 「4운동 및 일반운명의 이론」 1808.

「가정적 농업적 협동사회론」 1822.

「산업적 협동사회적 새세계」 1829.

○ 인간은 사회 환경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고 불변하는 자연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 역사발전단계는

- ① 산업발생 전기
- ② 분열, 허위, 모순의 산업기
- ③ 협동사회적, 진실적, 매력적 산업기 등으로 분류

②단계의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의 이익은 전체의 피해가 수반되고, 한쪽의 많은 부의 배분은 다른 쪽의 제자리걸음을 강요한다고 보았고, ③단계의 협동사회는 정령인력의 이론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한 결 같이 협력하는 사회로 보았다.

○ 파란쥬(Phalange) 협동조합;

파란스텔(Phalanstere) - 400명~1800명이 협동생활
전 노동력의 3/4은 농업에 1/4은 공업에 투하.

파란쥬 공동수익 배분기준

- ① 각 구성원의 최저생활 보장위해 일부를 공제하고
- ② 그 나머지 5/12 노동에
- ③ 4/12 자본에
- ④ 3/12 재능(경영, 지도 등)

○ 소비조합 보다 생산조합에 의한 이상 실현코자 하다.

5) 불란서, 루이. 브랑(J.J.ch.d. Blanc, 1813-1882)

○ 협동조합적 국가사회주의자

○ 주저 : 「노동의 조직」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부자가 빈자를, 특권자가 비특권자를 압박하고 파멸시키는 경쟁의 자유로 왜곡되어 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무질서한 경쟁은 임금저하를 가져오며, 기계의 등장은 노동자를 추방하고 저임금과 빈곤을 초래한다.”

○ “사회공장” 이란 노동자 생산조합 설립주장.

○ 1848 사회민주당 임시내각에 입각하고 「국민공장」 설립

6) 독일, 술체 · 델리추(Franz Herman Schulze-Delitzsch, 1808-1883)

○ 독일의 본원적 축적은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되다.

수공업자들과 소농민 층이 고리채에 시달리다.

○ 세습재판관, 국회의원 역임.

○ 도시의 자조적 신용조합운동 주도.

○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도입 주장.

7) 독일, 라이파이젠(F. W. Raiffeisen, 1818-1888)

○ 농촌 신용조합 주도.

○ 1850. 정부는 지대은행을 설립하고 농노들에게 농지대를 갚도록 하였으나 연부상환 능력이 없어 고리채에 의존하다.

○ 고리채의 종류

① 금전대차에 의한 고리.

-년 60% - 80% 고리.

-대부기간 짧고.

② 가축고리

-고가의 가축을 외상으로 사게 한 뒤 궁핍을 이용 갈취

③ 토지고리

-토지 살 사람의 빈곤을 이용 고리채 쓰도록.

④ 상품고리

- 농민의 곡류, 가축 등을 염가로 사고 상인이 가진 비료 기타 상품은 비싸게.

8) 독일, 랑살(Ferdinand Johann Gottlieb Lassalle, 1825-1864)

○ 사회민주주의 운동가

○ 임금철회설 - 생활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최저 생계비에 접근하는 임금

○ 생산조합 주장.

○ 국가의 지원 필요. (술체 데리추와 대비)

○ 국가관 - 피이테와 헤겔 영향 받음.

“국가는 최고의 논리적 이념의 실체”라는 입장

- 1862 「노동자 강령」, 1863 전독일 노동자협회창설, 회장취임.

9) 독일, 슈타딩게르(Franz Staudinger, 1849-1921.)

- 신칸트학과(마르크스 유물론에 접목 칸트의 이상주의 소비조합 주장.)
- 마르크스의 잉여가치가 생산과정에서 창조되고, 소비과정에서 실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소비조합 구상.
- 소비자 주권주장 - 구매자카르텔(소비자 독점)

“칸트의 이상을 실제 생활에 유효케 하려면 마르크스에 도달할 것이요, 마르크스가 자각적 변혁을 목표로 삼게 된다면 칸트에 도달해야 한다.”고

- 신칸트학과 서남독일 학파
Marburg 학파
Marburg 학파 - Kant and Marx로
오스트리아 사회주의자 - Kant in Marx로

10) 스페인 돈. 호세 마리아(Jose Maria, 1915-1976)

- 문드라곤협동조합 건설자. 신부
- 맑스주의 자본주의비판에 동조한다. 맑스주의원칙의 주요관점에 대해서는 반대. 제3의길
- “협동조합주의는 특권계급의 형성을 저지하기위하여 권력의 인격화와 경제의 민주화 그리고 단합협동을 통해서 양심과 문화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하려한다.”
- “소유는 공동생활에서 책임감과 능률성을 높이는 효과적 원천으로 작용하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
- “협동조합주의는 자본주의를 능가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과 보완책과 함께 자본주의적 방식과 자본주의 동력을 활용해야 한다.”
- “협동조합주의는 다원주의적 세계관과 만난다.”
“공기업과 사기업,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가부장적 형태의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형태간의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형태의 접합, 모든 행동의 본질, 모든 공동체의 발전과 진보의 수준은 각각 특수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한다.”
- “협동조합은 여러 조직 중의 한 형태다.”
-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이지 선반 기사나 도안가, 의사나 기술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훌륭한 전문가나 기술자로 되기 위해서는 학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노동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진 곳이다.”

“인간은 협동조합 주의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협동이란 원칙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교육과 선행의 실천을 통해 협동조합주의자가 될 수 있다.”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실수하는 것이 더 낫다. 실수를 통해 행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는 나가면서 길을 만든다.”
- “혁명을 믿지만 추구하는 방법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협동운동은 노동운동의 전위적 요소의 하나다.”
- Mondragon 경험이 완벽한 사례는 아니다. 그것은 열려진 길이며, 노동자들의 생각과 결과와 방법을 비교하는 곳이며, 모든 경험양식들의 결과를 시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이라는 견지에서 해석되는 것이다.

2. 하이데거의 귀향의 의미

- 산업적 대중사회의 인간관계는 일시적, 표면적, 계산적이다.
인간적 소외 현상을 본다.
- 하이데거는 뢰를린의 시 「고향」을 인용하면서 현대인의 귀향을 노래한다.
“회회낙락하게 뱃사공은 고향의 잔잔한 흐름으로 먼 섬들로부터 어장을 마치고 돌아온다.
그렇게 나도 괴로움만큼 많은 것을,
흡족한 수확이 있었더라면 즐겁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일찍이 나를 길러준 낮 익은 바닷가여,
그대는 사랑의 괴로움을 가라앉혀 주는가,
그대는 다시 한 번 편함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인가.”
- 본래적이고 친숙함이 있는 고향으로의 귀향은 비본래적이고 소외감이 젖어있는 현대인을 안내하는 말이다.

3. 우리가 협동조합 사상가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협동사상가들을 만나보는 학습은 곧 협동조합 본래적 모습을 찾아보는 “귀향길”이기 때문이다.